

## 〈특별기고〉

## 한국의 인구주택 총조사 발전

이 강 우\*1)

## I. 서 언

인구주택 센서스 즉, 인구주택 총조사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영역 또는 제한된 지역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에 관한 개개의 특성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자료 및 주택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 공표하는 일련의 과정(total process)을 말한다. [4]

이러한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구통계 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의 기초가 되며, 인구주택 총조사의 정확도는 한나라의 통계발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총조사를 원천으로 하여 작성 되어왔고, 장래 인구추계 및 인구가동과 생명표에 관한 분석 등이 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수집, 생산되는 자료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교육, 보건, 고용, 후생, 주택, 지역발전 등 각종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되는 등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급진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수반된 높은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인구주택 총조사의 총조사의 실시는 점차 복잡하고 어려워 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의 발전과 그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인구주택 총조사의 중요성 및 곤란성을 인식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II. 인구주택 총조사의 발달과 그 여건

인구주택 총조사는 역사 이래 농업사회가 정착되면서 인구에 대한 관심이 집약되어 중국을 비롯하여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희랍, 로마 등에서 단편적인 인구조사의 예가 있다. 한국에서도 고조선시대부터 호구가 파악되었으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매 3년마다 호구를 조사하였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호구조사 제도를 정비하여 『장정조사』와 『호구조사』라는 명칭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인구총조사는 179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아시아에서는 1906년 중국, 그리고 1920년에는 일본이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1919년 6월에 총독부령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제 103호로 국세조사규칙을 제정하여 “총독관방 총무국”에 통계과와 국세조사과를 설치(1918년 5월)하여 국세조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의 확산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였다. [5]

이후 1922년에 법률 51호로 국세조사법을 개정하여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조사주기 사이에 5년마다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국세조사에 관한 법제적 근거를 정비하여 1925년 5월 총독부령 제 66호 『1925년 간이국세조사에 관한 건』에 의하여 동년 10월 1일 오전 0시 현재로 조선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 성별, 출생연월, 배우관계 및 본적(또는 국적)을 조사하였다. [5] 1925년 센서스는 확고한 이론에 바탕을 둔 치밀한 계획하에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센서스는 이론의 심오성보다는 강력한 행정력의 지배 즉, 강력한 시행조직과 이의 구사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양질의 조사가 이루어 졌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 채용한 “센서스 인구”의 개념이 현재인구(Defacto)였고 게다가 조사구 설정 방법이 미숙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누락 인구가 많았을 것이며, 특히, 유동인구의 파악은 극히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집계방법에 있어서도 조사원→면→군→도의 형식으로 소위 地方分査에 의한 手集計 방법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자료처리 오류(error)를 수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

1930년과 1935년 국세조사는 自計式 조사를 시도하였다고 알려졌으며 이때에 집계방법으로서의 종전에 부, 읍, 면 집계와 도 집계를 취합하여 중앙에서 조사집계하던 것을 計牌(card)에 의한 기계집계를 하면서 각 도별로 부호와 천공 및 기계분류에 의한 집계표를 작성하였다. [5] 특히, 1935년은 제 2 차로 시행된 간이국세조사로 현재인구(De facto)를 원칙으로 채용하되 상주지(De jure)개념을 병용함으로써 지역적인 인구분포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센서스를 2~3회 거듭하는 동안 과거 센서스의 실시에서 나타난 결정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원을 전형을 통하여 채용하는 등 보다 치밀한 계획하에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

1940년 국세조사는 「1940년 국세조사 시행령」에 의거하여 성명, 가구상 관계, 성별, 출생년월일, 배우관계, 소속산업, 직업, 지정기능, 병역, 출생지, 본적지 및 민적 또는 국적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1940년과 1944년 인구조사의 결과는 전시정보로서 철저하게 통제하였으며 발표를 하더라도 개략 숫자를 공표하는데 불과하였다. [5]

이와 같이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인구총조사는 1925년 이래 국세조사 및 간이국세조사의 명칭으로 5년마다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일제하에서의 인구조사는 식민지로서 조선에서 노동력 착취, 경제수탈을 위한 것으로 인구조사로서의 그 기본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또 조사의 결과마저도 엄격히 비밀로 처리되어 일반 국민에게 철저히 이용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국토가 양단되면서 지역적 범위의 상이 등으로 그나마 기존 인구 자료는 거의 이용할 수가 없다. [3]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농공균형입국을 지향하는 산업국가 건설의 연차 계획수립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경제생활의 향상을 기획하는 종합적인 정부방침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신속정확한 통계작성의 수립에 필요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제반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보처에 국세조사과를 설치하고 1949년

1월 27일에 인구조사법(법률 제 18 호)을 마련하여, 1949년 5월 1일에 남한에서만 제 1 회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때 총조사항목 중 성명은 중복 또는 누락 및 오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가구에 있어서의 지위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변화를, 그리고 배우관계는 남녀이합의 상태 및 민족의 풍습 또는 관습을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직업 항목은 산업연차계획수립 등에서 노동배치 또는 실업자 대책 그리고 국토계획의 수립 및 국민경제의 조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학력 항목은 우리나라의 문맹률을 파악하여 성인교육 또는 미취학 아동의 교육방침 및 학교종류와 교육과목을 한국 현실과 장래에 맞게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군사경험란과 징용경험란은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으로 학병 또는 징병으로 끌려간 청·장년들 중 살아서 귀국한 숫자의 파악 및 이를 근거로 대일배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조사방법은 거의 일제시의 센서스와 대동소이한 조사로 판단되며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조사실시가 어느 때보다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조사결과로서 인구현황은 이듬해 6·25 동란으로 각 특성별로 집계하지 못하고 단지 총인구수의 파악에 그쳤으며, 이들 인구자료는 속보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조사자료가 소실, 분실되어 버렸다.

중전후 기존의 모든 산업 및 사회제반시설이 파괴되고 국토는 황폐되어 국민의 생활은 궁핍해졌다. 이러한 수난에 대처하고 경제부흥을 위하여 정부는 미국 등의 자유 우방국의 원조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분포 및 상태 등에 관한 통계의 부족으로 부흥건설의 계획은 수차례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2]

이러한 통계수요에 대처하여 합리적인 통계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1955년 2월 17일에는 공보처로부터 내무부로 통계국을 이관하면서 기획, 국세조사, 인구조사과를 설치하여 1955년 9월 1일자로 내무부 산하행정기관을 동원하여 간이 총인구 조사를 실시(인구조사법 제 2조에 의한 간이 총인구 조사령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변직후의 사회적혼란과 극심한 인구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조사의 실시계획 및 운영 관리면에서 결함이 많았으며 극히 단순하게 설정된 조사구에 자체식 기입방법을 채용함으로써 응답오차와 조사의 누락이 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통하여 전국적인 인구를 처음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간이 총인구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그간 인구의 정태와 인구의 동태 등을 종합하여 처음으로 추계인구를 산출하게 되었다.

1960년에는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인구, 주택 및 농업 총조사(World census programme)를 계기로 우리나라 총조사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당시 일본의 통계재건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라이스(S. A. Rice)박사가 주재하는 통계고문단이 내한하였으며, 이 사절단의 역할은 정부가 조직행정 및 사업활동을 망라한 개선된 통계계획을 진전시키고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12개 부문에 관한 사항을 협조하기로 계약되었다. 12개 부문에 관한 협조사항을 완수키 위하여 이 사절단은 1958년말까지 라이스(S. A. Rice) 등을 통계고문으로 구성한 제한단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 이 사절단은 1960년도 인구, 주택 및 농업조사의 계획과 준비를 취급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한국은행이 작성한 농업조사계획안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위시한 국세조사 표준사

무가 전혀 없었으며 조사사무가 한국의 실태에 너무나 상반되었기 때문에 이 사절단은 건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건의결과로서 국세조사위원회의 설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초안되었고, 그 후 국무회의는 동법안을 통과시켰다(1959년 2월 10일 대통령령 제 1449 호).

동위원회는 UN 권고에 의한 인구, 주택 및 농업에 관한 대규모적인 총조사를 종래와 같이 내무부 통계국, 보건사회부 원호국 및 농림부 농정국에서 각각 주관하므로 인해서 통계기관간의 통계의 중복, 조사경비의 불균형, 통계체제의 혼란, 통계의 독립성 등 분산형에서 야기되는 여러가지의 난점을 조정하는 강력한 기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설치하였다. 동위원회는 1960년 3월 1일에 인구, 주택 및 농업총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과거에 없었던 이들 총조사에 대한 사후조사를 동년 3월에 실시하였다. 한편 조사범위는 인구, 주택 및 농업에 관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단순한 수적 사실을 종합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상호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정부수립 후 10개년간의 국가발전의 양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게 되었다.

1960년 센서스는 조사방법상의 미숙한 점 특히, 조사구의 설정방법이나 용어정의에 있어서의 허술한 점(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직업과 산업) 등은 있으나 계획단계에서부터 자료처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근대적 센서스의 양상을 탈피하고 근대적 센서스의 면모를 갖추었던 것이 오늘날의 발전된 센서스를 낳게한 결정적인 귀감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특히, 1960년 센서스는 인구자료의 생산 이외에도 각종 표본의 틀(frame)을 설정하는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도 크게 공헌하였다는 것도 업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7]

1966년 인구총조사는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투자자원 확보에 따른 예산사정으로 당초 1965년에 실시하려던 계획을 1년 연기하고 1960년 당시 약 6만개의 조사구를 3만 9천으로 줄이고, 또 주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애로가 많았으나 조사계획이나 조사항목의 정의 및 조사원의 훈련 등에 있어서 보다 정돈되고 치밀한 계획하에 실시되었고, 집계과정에서도 전자계산기(EDPS)를 사용하여 자료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결과표의 항목을 한층 풍부하게 하였다. 특히, 센서스 실시를 위하여 강력한 행정력이 동원되었고 과거 Census에서 지방 관리나 통·반장 등을 채용했던 것과 달리 행정조직과 관계없이 조사원을 채용하였고 조사원 훈련에 있어서도 크게 발전되었던 사실이 조사요령서(Manual)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한편, 1966년 인구 총조사는 원래 전항목을 전수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인구의 기본적 속성(가구 및 인적 사항과 교육정도)만을 전수조사 하였으며, 보통조사구 중 1/10에 해당하는 3, 753개 조사구를 표본 조사구로 하여 이 조사구에 대하여서는 전수조사항목이외의 인구에 대한 자연적인 속성인 출산력(14세 이상자에 대한 취업여부,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항목을 조사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총조사는 이때부터 표본이론을 도입하여 조사나 집계과정에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오차를 최소한도로 줄임으로서 통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속·정확성을 기하게 되었다.

그동안 조사회수가 거듭하여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당초 인구의 기본적 속성에만 치중했던 조사항목이 통계자료 수요의 증대, 이용도의 다양화와 국제적 비교성 등으로 교육, 경제활동 등 경제적, 사회적 속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이 확대되어 왔다.

1970년 10회 총조사는 1960년 총조사와 같이 세계 센서스 계획(World census programme)에 의한 대규모 조사로서 주택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 하였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1966년과 대동소이하나 총예산 약 10억을 투입할 수가 있었으므로 실사과정에서는 조사원의 보수를 증액(약 5,000원 정도 지급)할 수 있었고 Mapping 이 1966년보다 강화되었다.

그리고 인구의 증가와 이동현상 및 도시집중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표본조사에서 출산력 및 인구이동에 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제반 사회경제계획 및 정책의 기본자료 제공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자료처리에서는 보다 현대화된 전자계산기의 도입으로 처리기간이 더욱 단축되었다.

1975년 총조사는 “총인구 및 주택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으며 초혼연령과 취업희망 등이 추가 조사되었다. 1980년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서는 구체적인 교육실태 파악을 위하여 전공과목이 그리고 교통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교통 실태 파악을 위한 통근, 통학 등에 관한 조사항목이 새로이 추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1985년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서는 이전 총조사에서 인구, 가구, 주택 등 기본항목은 전수조사를, 경제활동, 출산력, 인구이동 등에 관하여서 표본조사를 했던 것을 총합 축소하여 전항목을 전수조사하므로써 소지역별로 더욱 정확한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씨, 본관 및 종교별 분포 파악을 위한 조사항목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14차 인구총조사이자 6차 주택총조사인 1990년 조사는 국어를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종래 타자식 방법에 의한 자료 입력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오타 등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여 조사결과의 발표가 늦어지는 단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광학판독(OMR)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 기법은 조사된 내용을 OMR조사표에 이기하여 광학판독기에 직접 입력 시킴으로서 자료입력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입력오차도 극소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광역교통 행정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에 관한 항목(통근, 통학여부, 통근(학)의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이용 교통수단 등)을 전수조사하고 또 소득분배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위하여 처음으로 가구의 평균 소득규모를 표본조사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외에는 지방 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소구역 정보기법(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도입하는 등 조사결과의 지역별 분석을 강화하였다.

### III. 인구주택 총조사에 나타난 인구 추이

1925년 간이 국세조사시 조선의 총인구는 19,020천명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성비는 104.6으로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30년에 들어서서 공식통계인구가 비로서 2천만명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인구증가는 연평균 약 1.5% 내외로 안정을 보여 해방직전에는 총인구수는 25,120천명으로 20년사이에 약 6백만명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성비 구성은 매년 낮아져 1944년 국세조사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자의 징용 및 장정들의 도피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5]

남한의 제 1 회 총조사 시행연도인 1949년은 해방직후의 혼란과 무질서가 어느 정도 정돈되었고, 해외에서의 귀환자도 일단락 되었으며, 북한에서의 월남자도 해방전에 비하면 그 대세는 훨씬 약화되어, 인구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안정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49년 5월 1일 제 1 회 총인구조사가 실시될 때, 남한인구의 총수는 20,189천명이었으며, 남녀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100.1명으로 나타나 거의 균형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 1>

그러나 1950년 한국동란은 국토의 황폐화 뿐만아니라, 인구면에도 지대한 변동을 초래하였다. 전쟁으로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구조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또한 조혼관행이 중식되게 되었다. 즉, 6·25 동안 전체국민의 거의 1/4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전통적 가족구조와 촌락구조가 뿌리째 파괴 되었으며 개인주의적 출세방식과 핵가족제도에 보다 더 사회적 가치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곤경은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였고 젊은이들은 결혼시기를 늦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행하던 다출산 가치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인공유산 및 피임방법이 합리적으로 널리 사용하게 된 것도 바로 전쟁으로 인한 사회혼란의 결과였다. [9]

전쟁으로 미친 영향은 가족관이나 출산조절행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가족형식 및 출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병역징집, 사상자의 발생, 피난민의 전시곤경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결혼을 지연시켰거나 또는 오랜기간 동안 별거하였다. 그 결과 휴전이 되어 평상을 되찾은 후에 결혼의 물결이 높아지고 출생이 급증하여 1950년대 말기에 들면서 전후 「베이비 붐(baby-boon)」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8]

1955년 총조사 보고에 따르면 실제의 수는 훨씬 더 많을 지도 모르지만 북한에서 월남한 전쟁피난민의 수는 약 45만 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주로 일반시민의 강제남북 및 전쟁 포로들로서 거의 전부가 남자였다고 믿어지고 있다. [6]

한편, 전쟁 동안 남하한 월남 피난민의 약 52 퍼센트가 1955년 총조사 당시에 농어촌지역에 주거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농촌에 정착한 피난민들의 약 3/4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정착하고 있었다. 이북 피난민들 가운데 도시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은 서울, 부산 그리고 인천지역에 집중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남동부 도시지역에 몰려와 있던 수많은 피난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 왔으나 전쟁피난민들이 몰려있었던 주변 도시 지역에서는 한동안 도시 순이출(純移出) 인구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6]

한편, 1949년 총조사와 1955년 총조사 간 인구증가는 위의 이유들로 대체로 저조를 면치 못하였다. 즉 이 기간동안 인구증가는 약 130만명으로 연간 약 20만명이 증가한 셈이고 증가율은 1.02 퍼센트에 그쳤다.

1953년 한국전쟁의 종전으로 사회의 혼란도 점차 정돈되고, 인구면에서도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인 요인에 의하기보다는 대부분이 자연증가에 의해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 인구 주택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남한의 총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1955년에 비하여 약 350만명이 증가하여 총조사 연간 인구 증가는 약 70만명에 달하였고, 총조사간 인구증가율도 2.88퍼센트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급증은 흔히 종전후에 나타나는 혼인율의 상승과 이에 따르는 높은 출산율이 주된 원인이며, 의학의 진보와 보급에 따르는 사망률의 감소도 그 주된 요인의 하나라 하겠다.

1962년부터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온 가족계획사업과 해외이주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구억제정책은 높은 인구증가율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왔다. 이와같은 인구억제정책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1961년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5퍼센트에 지나지 않았고, 인구는 연평균 3퍼센트란 높은 증가율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높은 인구증가율에 잠식되어 구조적인 빈곤의 악순환만이 계속되어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경제개발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6년 인구총조사에서 인구증가율은 종래 2.88퍼센트에서 약간 떨어진 2.70퍼센트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율로 1960년 총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24,989천명의 인구에 약 500만명 즉, 70만명이 증가하여 1966년 10월 1일 남한의 총인구는 29,193천명이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형성된 소자녀관(小子女觀)은 인구증가율을 급속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그 결과 1966년과 1970년 사이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8퍼센트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동안 인구증가는 연평균 56.8만명 그리고 64.8만명으로 나타나 1970년 10월 1일 총인구수는 31,466천명, 그리고 1975년 10월 1일 총인구는 37,707천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이룩하였던 고도경제성장과 소자녀관이 전반 사회계층에로의 확산 및 피임실천의 보편화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은 1.5퍼센트 정도이었으며 1980년대 중엽에는 1퍼센트 정도의 인구증가율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 11월 1일 인구총조사에서 총인구는 37,436천명으로 나타나 1975년 총조사와의 사이에 연 546천명이 증가하여 5년간 인구는 270만명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1985년과 1980년 총조사 사이에는 연평균 약 60만명이 증가하여 총 300만 정도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낮은 인구증가율은 1962년부터 6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국민소득의 향상은 물론이고 산업구조의 근대화, 교육 및 보건수준의 향상, 사회보험제도의 확충 등 제반 경제분야에서 현격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그 간의 인구억제정책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인구는 종래 양적인 문제에서 급속히 질적인 문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들은 1970년대부터 크게 부각되어온 인구분포의 불균형 즉, 도시화의 급진, 농촌인구의 감소, 그리고 지역간 인구분포의 불균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IV.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인구주택 총조사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쳐왔다. 해방전 일제 치하에서는 식민지 수탈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작성되었으며 1949년 인구총조사에서는 6·25 동란으로 속보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조사자료가 소실 분실되는 수난을 겪게 되었다.

1955년 인구총조사에서는 비로소 우리나라 인구수의 파악이 가능하였으며, 1960년에는 UN의 자금과 기술의 지원으로 현대적 의미의 인구조사가 시행되었다. 이후 인구총조사는 우리나라의 통계행정 및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의 제공원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그 규모나 내용 및 방법면 등에서 거듭발전을 하여 왔다.

이러한 역사를 거처온 인구총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각종 정책은 바로 인간 즉 국민을 위해서 수립될 때, 그 의의를 갖게 되므로 인간에 대한 바른 통계가 작성되지 않고서는 인간, 즉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 하겠다.

환언하면, 교육, 교통, 고용 지역개발, 식량, 의료, 보건, 주택, 환경 등 제요인들은 인간을 위해서 필요되어,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및 특성과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올바른 통계가 없이는 사회 및 국가를 적절히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금년에 우리 통계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장·단기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민간의 인구통계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약 4,300만명의 인구와 730만채 가량의 주택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총조사에서는 예산의 규모면에서, 방법론적인 면에서 그리고 자료처리 과정에서 다른 때의 조사와 비교하여 획기적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 많은 사람들이 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서 통계를 제공해 주는 국민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통계를 다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국민에게 올바른 통계관을 심어주는데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표 1> 총조사 인구 추이

연 도 (조사기준일)	센서스 <sup>1)</sup>		증 가 율 <sup>2)</sup>	성 비 <sup>3)</sup>	
	인 구	남			여
1925. 10. 1	19,020	9,726	9,294	-	104.6
1930. 10. 1	20,438	10,399	10,039	1.4	103.6
1935. 10. 1	22,208	7,271	10,973	1.7	103.1
1940. 10. 1	23,547	11,839	11,708	1.2	101.1
1944. 05. 1	25,120	12,521	12,599	1.8	99.4
1949. 05. 1	20,189	10,201	9,988	-	102.1
1955. 09. 1	21,526	10,767	10,760	1.02	100.1
1960. 12. 1	24,989	12,544	12,445	2.88	100.8
1966. 10. 1	29,193	14,702	14,491	2.70	101.5
1970. 10. 1	31,466	15,796	15,670	1.89	100.8
1975. 10. 1	34,707	17,461	17,245	1.98	101.3
1980. 11. 1	37,436	18,767	18,669	1.50	100.5
1985. 11. 1	40,448	20,244	20,205	1.56	100.2

1) 인구 1000명

2) 센서스 연간 평균임

3) 여자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수

※ 해방이전 수치는 남북한 합계임



## 참 고 문 헌

- [1] —— (1949), “대한민국통계 월보”, 창간호, 공보처 통계국.
- [2] —— (1958), “한국통계월보”, 내무부 통계국.
- [3] —— (1970), “한국통계조사현황”,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4] —— (1974),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1970 Population Censuses”, United Nations, p.25.
- [5] —— (1989), “한국통계발전사(정부수립 이전사)”, 統友會
- [6] —— (1989), “최근의 인구정책과 방향”, 한국 인구보건 연구원.
- [7] 고응린 외(1974), “인구통계 세미나”, 대한 통계 협회, 3, p. 7-9
- [8] 김선웅 외(1983), “한국의 경제 개발과 인구정책”,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연구.
- [9] Kwon, T. H. (1975), “Demography of Korea :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6 ~1966”, Seoul National University.